

【 2015.03.10(화) 강원일보 】

도체육회 추가 임원 선임 놓고 일부 대의원 불만 표출

도체육회의 추가 임원 선임을 놓고 일부 대의원이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도체육회는 10일 2015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50명 이내로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이번에 경기단체 직능 14명과 대학, 여성, 방송 등에서 모두 20명이 선임안에 포함됐다. 이번에 새롭게 임원으로 추가될 경기단체장 이사는 정동기(육상) 권은동(축구) 김미동(정구) 신창승(력비) 김동일(사

이클) 김병국(유도) 정완교(사격) 박영일(양궁) 오수일(태권도) 최완순(롤러) 이봉선(보디빌딩) 김형삼(바이애슬론) 김희찬(컬링) 조영재(봅슬레이·스켈레톤) 회장으로 모두 14명이다. 임부자 근대5종회장은 여성 몫이다. 이에 대해 한 대의원은 “추가 임원의 선정 요건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전형위원은 “추가 임원은 종목, 지역 등 형평성에 맞게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보경기자

【 2015.03.10(화) 강원도민일보 】

지역 중소건설업체 참여제한 논란

동해시청 증축 입찰 기준
사실상 3개업체만 참여가능
시 “타지업체 선정편 제재”

GS동해전력이 북평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동해시와의 세부협약사항 가운데 하나인 동해시청 부속건물 신·증축공사와 관련된 입찰 공고가 지역중소 건설업체들에게 지나치게 제한됐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9일 GS동해전력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60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3812㎡ 규모의 시청 부속건물 신·증축공사를 추진키로 하고 지난달 동해시 지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입찰 공고했다.

그러나 지명경쟁입찰(저가)방식이 무색할 정도로 입찰 공고 조항에 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을 120억원 이상으로 제한, 사실상 지역 내에서는 3개정도의 건설업체만

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로 인해 지역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은 공사 수주는 커녕 참여 기회조차 박탈되는 등 공평성이 없는 입찰이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중소건설업체 관계자는 “북평화력발전소 건립으로 피해를 보는 동해지역 주민들의 보상 차원에서 세부협약이 이뤄진만큼 동해지역 건설업체가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GS동해전력 관계자는 “시청 부속건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이어서 견고하게 짓기 위해 시공능력이 뛰어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선정된 시공사가 지역 건설업체가 아닐 경우에는 제재를 위한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동해/조병수 chobs@kado.net

1월 국내 수주 역대 최고치... 건설경기 '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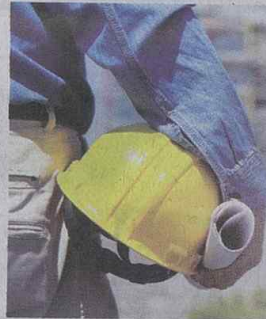
9.2조...작년보다32.7% 늘어
'민간' 74% 늘며 증가세 견인
건축허가·착공 지표도 호조

새해 들어 건설경기에 온기가 돌고 있다. 첫 달 국내 수주실적이 1월 기록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건축허가와 건축착공 면적, 미분양주택 현황 등의 지표도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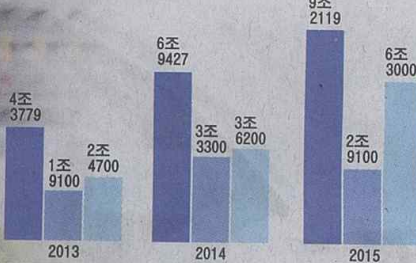
9일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가 발표한 국내 건설 수주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이 작년 같은 달 6조9427억원보다 32.7% 증가한 9조21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건협이 지난 94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1월분으로는 가장 많은 금액이다.

실적 증가세는 민간부문이 견인했다. 1월 민간부문 수주액은 6조3000억원으로 작년 1월보다 무려 74.2%나 증가했다. 토목공종이 1912억원으로 59.7% 감소했지만, 건축공종이 6조1088억원으로 94.5% 늘어난 결과다. 건축공종에서는 신규주택은 물론 재건축, 사무용, 학교·병원 등 전 부문이 모두 크게 늘었다고 건협은 밝혔다.

공공부문 수주액은 2조9119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5% 줄었다. 그러나 이 역시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작년 1월



2013-2015년 1월 국내수주실적 비교 (단위: 억원)



의 높은 실적(3조3266억원)에 대한 기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최근 10년간 1월 실적 가운데 세 번째로 높기 때문이다.

공공공사 공종별로는 토목이 2조3758억원으로 10.7%, 건축은 5361억원으로 19.4% 감소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 수치는 협회가 94년 이래 조사한 국내 건설수주 1월분으로는 최대 금액"이라며 "공공과 민간 모든 부문에서 의미 있는 수주실적을 거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2월 건설기업경기 실시지수(CBSI)가 상승 반전했고, 민간 신규 주거부문 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대해 연초부터 건설경기에 온기가 감도는 것으로 해석했다.

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홍수)이 매달 발표하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는 지난 2월에 전월보다 7.7p 올라 83.5를 기록했다. CBSI가 2010년 이후에 80선을 넘어선 것은 올 2월이 네 번째다.

다른 지표들로는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1월 건축허가 면적이 961만9000㎡로 작년 1월보다 36.8% 증가했다. 건축착공 면적 역시 757만3000㎡로 45.2% 늘어났다.

1월 미분양주택은 전월보다 3394가구 줄어든 3만6985가구로 집계됐다.

이홍일 건설연 연구위원은 CBSI 상승에 대해 "무엇보다 최근 주택경기의 견조한 회복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라며 "상대적으로 주택매출 비중이 높은 중견업체가 2월 CBSI 상승을 주도한 것을 볼 때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택경기 회복이 건설기업 체감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정석기자 jskim@

조달청, 상반기 공공공사 시설자재 가격 평균 0.06% 인상

표준품셈 적용도 확대... 공사비 현실화 탄력

업계 수익성 개선 도움될 듯

정부발주 공공공사 공사비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시설자재(공통) 가격이 지난 하반기 대비 0.06%로 상향 조정된다.

표준품셈 적용범위도 추가 확대돼 표준시장단가 적용 및 일가계산 제비율 인상 등과 더불어 공사비 현실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9일 조달청은 최근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를 열어 올 상반기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시설자재가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기관과 학계, 건설 관련 협단체 등 민·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구로 분위원회와 건축, 토목, 기계, 전기·통신 등 4개 분과위원 35명으로 구성된다.

심의 대상은 정부발주 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설자재 등 모두 9622개 품목(시설자재 8729개, 시장시공가격 893개)이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른 품목별 가격현황을 보면 가격이 오른 품목은 철선과 PE필름류, 연삭기, 하드롱지, 벽지류 등 모두 1216개다.

반면 885개 품목의 가격은 소폭 하락했고 나머지 7497개 품목의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한 보합세를 나타냈다(신규등록 24개 품목).

이에 따라 전년도 하반기 대비 시설자재가격은 평균 0.06% 오르게 됐다.

최근 가격변동 현황을 보면, 원유가격 급락세가 이어졌던 작년 하반기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다.

지난 2013년 하반기 시설자재가격은

동년 전반기 대비 0.04%로 오른 바 있고 작년 상반기에는 이전 반기 대비 0.15%로 상승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0.05%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번엔 다시 상승 전환했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조사해 적용했던 시장시공가격 대신 표준품셈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저가납품 사례 등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공사비 측면에서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윤현도 조달청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위원장(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은 "이번엔 확정된 시설자재가격은 일부 원자재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중노임단가 등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절한 가격을 반영해 공사품질 확보와 기업의 적

정 공사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도 "실적공사비가 아닌 표준시장단가 도입과 더불어 간접노무비 등 공사원가 제비율 및 시설자재가격 상승으로, 공사비 현실화에도 속도가 붙었다"며 "건설사들의 시공적자 해소 및 수익성 개선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엔 확정된 시설자재가격은 공공기관은 물론 설계사무소 등에서 공사비를 산정할 때 활용할 예정으로, 조달청 나라장터(가격정보)에 공개된다.

또한 조달청은 '인터넷 가격검증(Feed-Back)시스템'을 통해 앞으로 시설자재가격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 적정공사비 산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승권기자 skbong@